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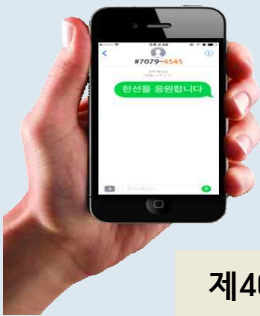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국민에게 이로운 정부 만들기

[발제자] 강영철 KDI 정책 대학원 초빙교수

[일 시] 2022년 6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402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경제가 혁신하도록 돕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얻는다.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성장의 동력을 틀어막는 규제 때문이다. 한국은 OECD가 상품시장규제지수(PMR)를 처음 발표한 1998년 이래 시장경쟁을 후퇴시키는 규제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한국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을 규율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 때문이다.
-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행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치가 정책방향을 결정해도

이행 계획은 행정에 맡겨야 한다. 정치에서 자유로운 독립기구를 뒤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제한되고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는 고유 국가기능 수행조직이 필요하다. 5년 단위로 정부가 바뀌어도 국정과제와 정부업무평가는 분리하여 국정과제 외에도 부처는 고유의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각 부처 미션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치의 행정부, 공공기관 조직, 인사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부처조직 및 인사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 장관이 주어진 예산과 인력 하에서 조직구조와 인사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 유능한 정부란?

- ◆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고 가파르게 올렸다.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부조로도 소득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게다가 잠재성장률이 2.5%까지 급격하게 하락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미국과 비슷한 규모로 하락하였는데 미국은 1.4%~1.9%까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 그러나 미국은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안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 ◆ 경제가 혁신하도록 돕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에 기반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얻는다.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성장의 동력을 틀어막는 규제 때문이다. 한국은 OECD가 상품시장규제지수(PMR)를 처음 발표한 1998년 이래 시장경쟁을 후퇴시키는 규제 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을 규율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문민정부를 이루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국가개입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시장경쟁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유독 강하다. 실제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러시아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 ◆ 유능한 정부의 시발점은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으나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지나치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가격통제가 대표적인 예다. 결국 한국의 경쟁력 하락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 때문이다. 정부실패는 불가역성이 매우 높아 시장실패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한 번 입법화되면 되돌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다.

## ◆ 유능한 정부 만들기

- ◆ 행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에서 행정부의 무능의 가장 큰 이유는 정치에 있다. 정치의 성공이 행정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정치의 성공이 행정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갖지 않고 행정을 규율하려 하면 안 된다. 정치가 정책방향을 결정해도 이행 계획은 행정에 맡겨야 한다.
- ◆ 정치에서 자유로운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는 고유 국가기능 수행 조직이 필요하다. 미국은 이를 위해 CIA, 공정거래위원회, 환경청 등 독립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제한된 정부 기구가 필요하다.
- ◆ 국정과제와 정부 업무평가를 분리해야 한다. 국정과제 수행은 대통령 비서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각 부처는 각 부처의 고유 업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온 정부 조직이 국정과제 수행에 매달린다. 국정과제는 국민의 50%가 지지하는 것이다. 나머지 50%는 국정과제를 지지하지 않았다. 각 부처는 국민 100%의 후생복지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이를 제쳐놓고 국정과제 수행에만 매달리게 되면 정부가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
- ◆ 정부 각 부처의 미션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정부 부처의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행정부가 독자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명확한 미션이 없었던 예로 지난 정부에서 공정위가 ‘경쟁 보호자’나 ‘경쟁 파괴자’나 하는 논란이 있었다. 공정위가 반시장 독점, 불공정 행위 규제 업무를 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로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활동을 규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보호자’이어야 한다.
- ◆ 부처조직 및 인사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치의 행정부, 공공기관 조직, 인사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 장관이 주어진 예산, 인력 하에서 조직구조, 인사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장관이 인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는지를 감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인사검증은 인사 기획처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각 장관들이 인사검증이 필요하면 인사기획처에 물어보고 인사기획처가 인사검증결과로 자기의 판단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민간의 정책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전문지식은 공무원보다 민간에 더 많다. 이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공무원의 전문성도 확보된다. 보상, 승진, 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경력자 유입을 늘려야 한다. 또한, 공직자 학습 네트워크 역량이 필요하다. 학습에 뛰어나고 민간 네트워크가 뛰어나면 한 명의 공무원이 수십 명 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한 분야에 5~10년 근무하도록 제도를 바꿔

야 한다.

- ◆ 신산업, 과학기술, 교육 등 컨트롤 타워에 대한 요구가 많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는 이미 많은 컨트롤 타워가 존재한다. 특임장관제를 활용하고 합의되지 않는 이슈는 국무회의에서 끝장 토론하여 결정해야 한다. 국무회의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
- ◆ 정부 운영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스스로 생존을 위해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정부업무, 대국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자체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정부기관은 5개의 업무영역을 갖고 있다. 5개 분야에서 혁신적인 개선을 정부가 공유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행정 서비스 역량을 키워야 한다. 특히 필요한 곳은 규제이다. 규제와 관련된 중복 규제를 찾기 힘들다. 규제행정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활용하는 기술을 정책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규제준수 부담을 감축할 수 있다. 규제집행기관 스스로 운영에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다. 규제가 제대로 이행 되도록 감시할 수 있다.
- ◆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지역균형이 필요하다. 지방도 경쟁해야 한다.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너무 많다.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모든 지역이 지역제한조례를 갖고 있다. 지역제한 조례는 지역에 이로운가? 지역 토착세력과 지방권력의 이권공동체를 해체시켜야 지역발전이 가능하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